

## 지금 韓日關係를 생각한다

최상용(崔相龍)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가장 복잡한 관계에 직면해 있는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의 쟁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으로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역사문제와 관련된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국가이익의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1998년 10월 도쿄에서 한국의 김대중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총리 대신 간에 합의를 본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많은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계획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일본정부의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것과 한국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결정으로 이는 한일관계사에서 새로운 기점(起點)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역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독도문제이다.** 일본은 독도를 영토문제로 보고 있고 한국은 영토문재인 동시에 역사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문제에 대한 실현가능한 최선의 해결은 현상의 평화적인 유지(status quo)로, 이를 파괴하는 언동이나 정책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일 것이다.

**두 번째는 교과서문제이다.** 교과서문제는 역사적 사실의 확인과 함께 확인

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1차 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누구나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 역사해석을 하나로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역사해석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적 관용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내에서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있는 상태로, 일본의 보수적 주류신문인 요미우리(讀賣)신문의 회장겸 주필인 와타나베(渡辺恒雄), 일본보수정치 원로인 나카소네(仲曾根康弘),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 등도 총리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있다. 또, 제1야당 민주당 당수 오자와(小澤一郎)는 A급전범의 분사(分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일본 뉴라이트세력의 대표적 정치가인 아베(安倍) 전총리도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약속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중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수용하여, 총리 재임중엔 야스쿠니참배를 자제했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이념을 갖고 있는 두 나라로, 이는 한일간의 모든 쟁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둘째, 일본은 보수적인 너무나 보수적인 나라로, 지구상에서 1500년 이상 왕조가 한번도 변하지 않은 나라, 제2차 세계대전 후 수평적 정권교체(야당에 의한 단독정권)가 한번도 없었던 나라, 요컨대 역사에서 변화보다 연속성을 중시하는 나라라는 점이다.

셋째, 한국의 주장이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면 그것을 이해할 만한 일본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으로, 2001년 교과서 파동 때 문제의 역사교과서 채택율이 0.039%에 그쳤고 총리의 야스쿠니참배를 반대하는 일본국민이 53%였던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양국간의 쟁점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두 나라 지도자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화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다면 극복 못할 것이 없으며, 양국 지도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思慮(prudence)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역사문제에 있어서 절제된 언행은 양국 국민의 상호존중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 今、日韓関係を考える

崔相龍

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もっとも困難な局面に直面している。今回のシンポジウムでは、日本と韓国が両国の争点を解決する出発点として合意した「21世紀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の原則を再度確認し、歴史問題と関連する三つの争点に対して国家利益の相互認定を基にした合理的な選択の可能性を提示することに努めた。

1998年10月、東京で当時の金大中大統領と小渕恵三総理大臣との間で合意した「21世紀の新たな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の数多くの原則と具体的な行動計画の中で、もっとも重要な意味を持っているのは、日本政府の「植民地統治に対する痛切な反省と謝罪」の明文化と、韓国政府による日本大衆文化開放の決定である。これは日韓関係史における新たな起点としての意味を有しているといえる。国交正常化以後、日韓両国において争点になっている三つの歴史問題は以下の通りである。

まず一つめは、独島(竹島)問題である。日本は独島を領土問題とみなし、他方、韓国は領土問題であると同時に歴史問題であるとみなしている。周知のように、両国ともに独島を歴史的・国際法的にみて自国の領土であると公式に主張しているのである。したがって、独島問題に対する実現可能な最善の解決策は現状の平和的維持で、これを脅かす言動や政策を抑えることがもっとも賢明な方策であろう。

二つめは、教科書問題である。教科書問題は歴史的事実の確認であるとともに、確認された歴史的事実の解釈に関する問題でもある。一次資料により確認された事実は誰もその事実を認めるべきであるが、しかし、歴史解釈を強要することはできない。したがって、歴史解釈の多様性についてはある程度の知的寛

容を持たねばなるまい。

三つめは、靖国神社参拝問題である。この問題については日本国内である程度の答えは出ている。日本の購読部数第一位の保守系主流新聞である読売新聞の会長兼主筆である渡辺恒雄氏、日本保守政治の元老である中曽根康弘氏、また、経済団体である「経済同友会」も首相の靖国参拝には反対している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事実である。また、第一野党である民主党党首小沢一郎氏もA級戦犯の分祀を強く要求しており、日本のニューライト勢力の代表的な政治家である安倍晋三元総理も植民地統治に対する痛切な反省と「お詫び」を約束した村山談話と「従軍慰安婦」の存在を認めた河野談話を受けて、総理在任中には靖国参拝を自制していたのである。

以上、今まで言及したことをもとにして両国の責任あるリーダーは日韓関係の改善のために少なくとも次のような四つの事項を念頭に置く必要があると考える。

1. 日本と韓国はアジアで民主主義と市場経済という共通の理念を有する国である。このことは日韓のあらゆる争点を乗り越えうる共通の基盤となる。
2. 日本は保守的な、あまりにも保守的な国であるということ。たとえば、世界的にみても1500年以上にわたって一度も王朝交替が行われていない唯一の国家、戦後、水平的な政権交代(野党による単独政権)が一度もなされなかった国家、つまり、歴史において変化よりも連続性を重視する国であるということ。
3. 韓国の主張が現実的・論理的な説得力さえ持てば、それを理解する日本国民は少なくないということ。このことは、2001年の教科書問題が起こった際、問題の歴史教科書の採択率が0.039%にとどまり、首相の靖国参拝に反対する日本国民が53%にもなったことに表れている。
4. 両国の争点は過去にも存在しており、今もあり、そしてこれからも起こりうるだろうが、両国のリーダーが公式/非公式に対話しつつ、合理的な問題解決をしようとする意志さえあれば、乗り越えられない問題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また、両国のリーダーが問題解決のための手段・方法の選択において思慮(prudence)をなくさず、とくに歴史問題における節制した言動は両国民の相互尊重の基本となる。